

## 북한경제 연구 생태계의 위기와 향후 과제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msyang@kyungnam.ac.kr

만 2년 전 KDI가 주최한 ‘북한경제 연구환경의 변화’라는 주제의 좌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2022년 들어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환경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연구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좌담회 내용은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7월호에 게재되었다.

그로부터 만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유사한 주제로 글을 쓰게 되어 씁쓸하고, 또 참담한 마음이다. 2년 전에 비해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악화하였다. 북한경제 연구의 토대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현재 상태로 몇 년 더 가다간 북한경제 연구의 생태계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북한 및 한반도 문제는 핵문제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핵문제 이외의 것은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한 듯하다. 남한과 국제사회의 사람들에게는 북한의 여러 가지 대외적 행동 가운데 오로지 군사적 행동, 특히 핵무력 고도화만 눈에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김일성 시대부터 내려오던 기존의 대남·통일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이후 기존에 남한과 합의한 모든 것을 무효로 하는 것을 비롯해 이제 남북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말과 행동들을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미·중 전략적 경쟁,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및 장기화,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이 겹치면서 국제정세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국제 질서에서 새롭게 하이라이트를 받게 된 푸틴의 러시아는 이제 중국보다 훨씬 더 거침없는 행동으로 국제 질서의 향배를 불확실성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다. 아직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신냉전 시대, 한·미·일-북·중·러 진영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런 국제 질서의 격변은 북핵문제와 맞물리면서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서 이른바 주변 4대 강국의 영향력 강화를 초래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남한의 입지와 위상은 더욱 약화하고 좁아졌다. 또한 남한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면서 안보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북한에 관해 들려오는 소식은 핵문제, 군사적 행동 문제, 최근에 와서는 오물풍선 문제 등 좋지 않은 소식이 대부분이다.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북한에 혐오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총체적으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젊은 층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북한경제 연구자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경제 연구자는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자도 있지만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국책은행 등 공공분야 연구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보다 실천적 성격이 강하고, 이로 인해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정부정책 기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북한경제 연구자들의 북한경제 연구 자체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연구 결과물인 논문, 보고서도 줄어들고 있으며, 아울러 회의, 세미나도 급격히 줄었다. 연구 자체가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분야도 제한되고 있다. 이제 남북교류협력, 남북경협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이른바 '탈북'하는 북한 연구자들이 늘고 있다. 북한 학계에서는 북한 연구를 하지 않고, 다른 분야 연구를 하게 된 학자들에 대해 "탈북했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물론 농담이다. 실제로 북한경제 연구자 중에 올해, 즉 2024년에 북한경제 연구를 하지 않게 된 학자들이 꽤 있다. 북한 연구를 중단한 사람 중에 얼마가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이런 '탈북'이 일시적 탈북이 될지, 영구적 탈북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 및 비자발적 탈북 현상이 아직은 '탈북'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북한경제 연구자 집단 전체의 분위기 침체를 가져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기존 연구자의 이탈도 우려되는 일이지만, 신규 연구자 유입/충원 부진은 더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학부나 대학원에서 북한경제를 배우려는 사람들, 특히 전문적인 연구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북한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 더욱이 석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공부하던 학생 중에서도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의 길로 나서면서 인생행로를 바꾸는 사례도 하나둘씩 눈에 띄고 있다. 북한경제를 공부한다고 해도, 전문 연구자로서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실제로 필자가 직접 목격한 일이다.

반면 북한경제 연구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북한경제는 유엔 대북제재를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제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어려움에 처했던 북한경제는 2022년 여름 코로나 종식 선언을 계기로 엔데믹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종전의 경제수준을 일부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경제가 제재와 코로나로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또 이후에 엔데믹으로 과거 수준을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북·러 군사·경제 협력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북한경제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반면 북·중 관계는 의외로 개선이 지연되고, 따라서 북·중 무역 및 경제협력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북한은 팬데믹 기간부터 단순한 시장 통제를 넘어 계획/시장 이중경제에 대한 당국의 장악력 확대를 비롯해 이중경제 구조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올 초부터는 근로자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이와 연계하여 가격의 대폭 인상 및 가격체계의 재편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북한의 시장환율이 지난 6월부터 종전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북한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시도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장환율의 이러한 이례적 현상은 당연하다는 듯이 북한경제의 위기론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더욱이 붕괴론자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북한경제에 관해 매우 중요한 이슈와 논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집단이 기민하게, 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연구의 대상, 즉 북한경제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모습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는 대체 어떠한 성격의 변화인지 감을 잡기 어렵다. 단기적 동향이야 그러저럭 쫓아간다고

해도 중장기적 추세 변화, 구조적인 변화를 추적하기에는 종전보다 힘에 부치는 상황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10년 후의 북한경제가 현재와 유사한 상황일까? 즉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럭저럭 버티기’, 혹은 ‘어렵기는 하지만 붕괴는 하지 않는 상황’일까? 그래서 한국의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오로지 북한의 군사력, 핵능력 조사연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북한경제야 어떤 변화가 있든 말든 정확한 연구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즉 ‘대세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일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행위를 지속할 것은 분명하지만,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핵무력 고도화 행위를 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변화의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물론 변화의 형태와 성격은 한 가지가 아닐 수 있다. 스펙트럼으로 치면 양극단에서부터 여러 개의 중간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매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갑자기 남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남북 관계가 화해무드로 바뀌면서 교류협력이 개시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위기로 인해 체제가 급격히 변화하는 등 여러 형태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 연구자에 대한 수요도 여러 형태로 갑자기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전문적인 연구자의 양성, 배출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박사급 인력 양성에는 최소 5~6년이 소요되고, 심지어는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빵틀로 빵 찍어 내듯 연구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막상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필요해졌을 때 절대적인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어차피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경제 연구자들도,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집단적 대응방안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현재 북한경제 연구자들에게 몰아치는 북풍한설은 연구자 개개인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각자도생의 자세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북한학계에는 그런 요소가 스며들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이런 생태계 붕괴 조짐에 대응하기 어렵다. 반드시 여러 명이 모여서, 집단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